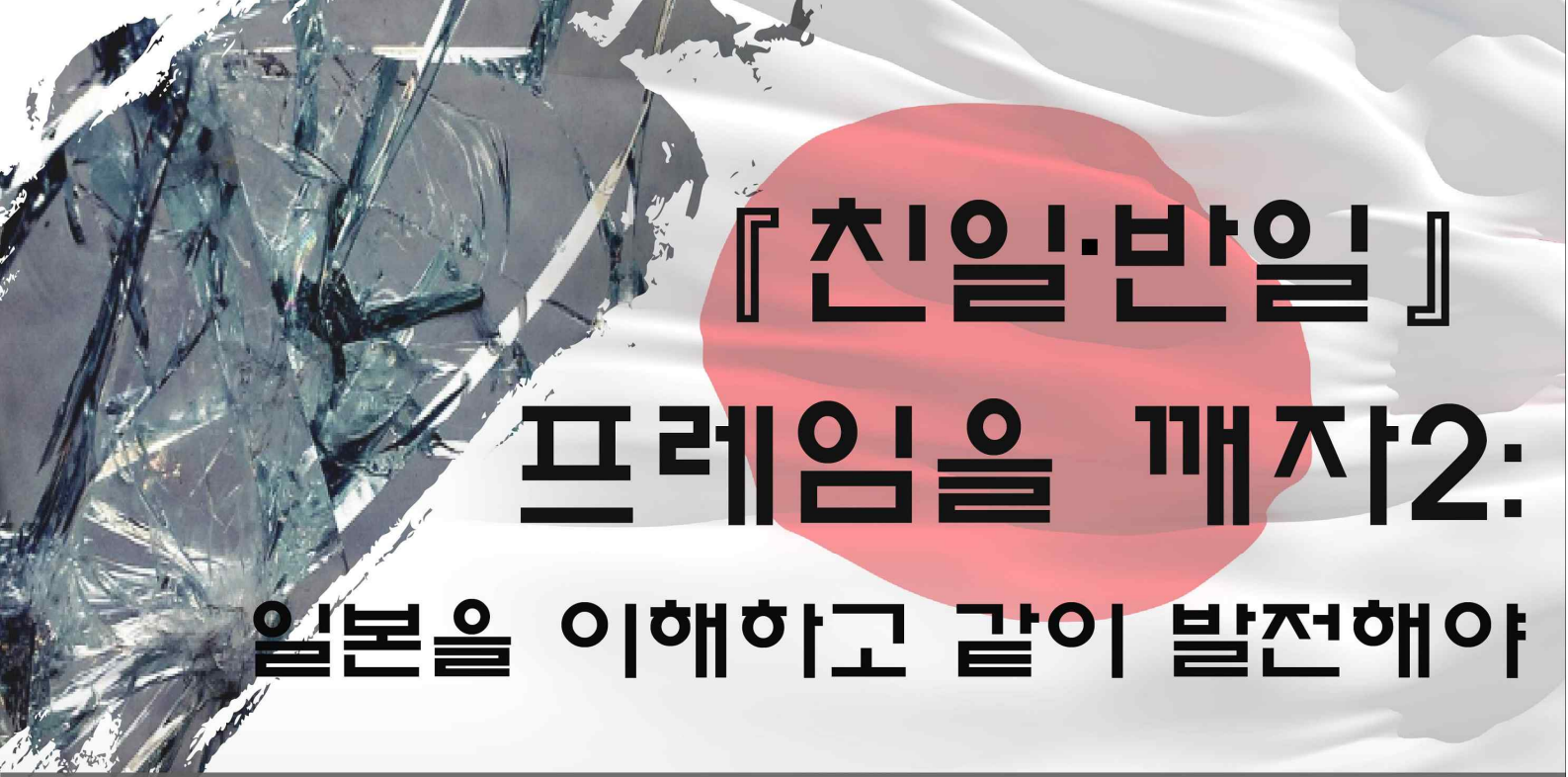




『친일·반일』 프레임을 깨자2: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

일 시 : 2019년 5월 3일(금) 오후 2시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 (종구 덕수궁길 15)

주 최 : 자유경제포럼,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 ————— 순 서 ————— ■

■ 사 회

- 현 진 권 (자유경제포럼 대표)

■ 발 제

- 김 인 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이 강 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 토 론

- 김 행 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 여 명 (서울시의회 의원)
- 홍 수 연 (자유경제&교육포럼 대표)

■ 질의·응답

■ 폐 회



■ 목 차 ■

■ 발 제

‘역사의 정치화’와 ‘관제 반일 민족주의’의 극복	9
- 김 인 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반복되는 반일 소동, 그 이면의 친북적 의도	17
- 이 강 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 토 론

- 김 행 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29
- 여 명 (서울시의회 의원)	33
- 홍 수 연 (자유경제&교육포럼 대표)	36



■ 정책토론회

발 제

■ 김 인 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이 강 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역사의 정치화’와 ‘관제 반일 민족주의’의 극복¹⁾

김 인 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시계(時計)

대한민국 국정 어디를 보아도 21세기를 선도하는 미래지향 아젠다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구촌 경제를 이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시계만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가 과거 지향적인 ‘친일 청산’과 ‘북한과 관계 개선’이라는 ‘민족 아젠다’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런 것 같다.

예를 들어 1945년 일제로부터 광복되었으니 광복 74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엔야말로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하고 있다. ‘친일 청산’은 과거 정부가 못다 이룬 과제이므로 남아 있는 오래된 폐단으로 적폐(積弊)가 되고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3·1 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항일 투쟁’이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등 마치 나라를 빼앗겨 떠도는 망명정부처럼, 또는 일제로부터 막 해방된 정부처럼 행동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일 청산’을 위해서는 남아 있는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도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과거보다 더 깊은 ‘진심으로의 사죄’와 해결책을 받아내야 한다. 이러한 ‘반일(反日) 민족주의’가 ‘관(官)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역사의 정치화’와 ‘관제 반일 민족주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초래한다.

2. ‘반일 민족주의’가 초래하는 외교적 고립

지금의 시대를 한마디로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음에도 과거 정부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반일 민족주의’를 의도적으로 부각시켰었다. 정권에 호의적 여론 물리와 정권 지지율의 상승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반일

1) 본 글은 김인영, “[다산 칼럼] 청산해야 할 ‘관제 민족주의’,” 『한국경제신문』, 2019년 4월 16일, 김인영, “시대착오적 ‘관제 반일(反日) 민족주의’를 끝내야 한다!”, 『펜앤마이크』, 2019년 4월 25일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99>)을 수정, 보완한 것임.

민족주의'가 만들어져 이용된 측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관제 반일 민족주의'는 쉽게 찾을 수 있다. 2012년 8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말 낮은 국정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헌정사상 최초로 독도를 방문했다. 하지만 의도했던 국정 지지도는 오르지 않았다. 대신 일본과의 외교관계만 나빠지기 시작했고 그 때부터 험한 서적들이 유명 일본 서점들에 깔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취임 초기부터 '과거사 문제'로 일본의 더 강도 높은 사과를 요구하며 2년이나 일본과의 외교 관계 진행을 멈추었다.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안보상 필요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2년 동안이나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한 재사과'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외교적으로 중국으로 경도되었다. 많은 학자들과 외교 전문가들이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멈추어지는 것이 외교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또 중국으로 외교적으로 경도된다는 것이 외교·안보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2년간이나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키지 않았다. 그 이후 중국으로부터 돌아온 결과는 외교적으로 유치한 '사드 보복'이었다.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이 왔을 때 한·미 동맹 강화와 일본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극복해야 했었지만 '과거사 문제'라는 양금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초기 대일 외교의 실패는 민족주의 감성을 국익(國益) 위에 존치시킨 때문이다. '관제 반일 민족주의'가 결과한 외교적 실패가 국가의安危(安危)를 위협했던 시기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반일 민족주의'가 '빨갱이' 색깔론, 그리고 보수 적폐론과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3·1절 경축사에서 친일 잔재 청산과 보수 세력의 행태를 연계시켰다.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 잔재'로 '빨갱이'라는 용어를 들었다. '빨갱이'라는 용어는 일제가 "독립군을 '비적(匪賊)'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思想犯)'으로 몰아 탄압"하며 이 과정에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 났으며, 그 '빨갱이'라는 용어를 보수 세력이 이용했으니 친일세력과 보수 세력 모두 청산되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김동길 교수는 일제시대에는 '빨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사실 관계를 부인하며 6·25 전쟁 시에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그 역사적 부정확성을 지적했다. 또 최장집 교수는 "(이는) 관제 민족주의의 전형적 모습"으로 "친일 잔재와 보수 세력을 결부시켜 갈등을 불러"오고 있으며 "지극히 갈등적인 문화 투쟁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²⁾ 김광동 원장은 현 정부의 일본 적대시 정책은 '대중의 분노를 동원하는 정치'로 소득주도성장으로 초래한 경제적 실패와 '북핵 외교' 실패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흐리게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³⁾

2) 김형원, "최장집 "문대통령 3·1절 기념사는 이념 대립 부추긴 관제 민족주의", 『조선일보』, 2019년 3월 18일(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8/2019031800313.html)

3·1절 경축사의 논리에 따르면 친일파와 보수 세력은 하나로 연계되고, 결국 친일파 청산과 보수 세력은 동시에 함께 청산되어야만 하는 대상이 된다. ‘반일 민족주의’로 친일 청산과 보수 청산이 한꺼번에 되는 정치적 효과를 가져 오게 된 것이다. 역사가 정치화되는 순간이었다.

3. ‘관제 반일 민족주의’와 ‘우리 민족끼리’의 만남

왜 통일이냐고 물으면 ‘우리는 한민족이므로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대답이 일반적이다. 하나의 민족은 한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허상을 만들어 낸 것이 민족주의다. ‘민족’과 ‘민족주의’ 자체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족을 강조하면 통일을 위해 개인과 사회는 모든 희생을 감수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게르만 민족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권’(Lebensraum)이 필요하다는 정책은 동부 우랄 산맥까지 도이치란트의 영토를 팽창시키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히틀러(Adolf Hitler)는 우랄 산맥 서부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을 우랄 동부로 추방을 하려 했다. 결국 독일 게르만 민족주의는 팽창주의와 침략주의와 식민주의 옹호로 변화하게 된다.

우리의 ‘관제 민족주의’는 통일에 대한 지나친 감성적 접근과 통일지상주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관제 민족주의’에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식 민족주의로 대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 민족주의’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라는 관제 반미(反美) 민족주의가 만나 ‘(한민족) 경제 공동체를 전제로 한 연방제’로 귀결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어 보인다. 북핵 폐기를 위한 북한 경제제재의 상황에서 ‘관제 민족주의’와 ‘우리 민족끼리’의 귀결점이 ‘반미 연합’이 될 것을 우려한다.

이렇게 우리의 ‘관제 민족주의’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에 화답하고 깊숙이 연대하는 모습은 진정 두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연대의 모습을 2019년 3·1절 기념사에서 이미 명확히 언급하셨다.

“우리 마음에 그어진 '38선'은 우리 안을 갈라놓은 이념의 적대를 지울 때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차이를 인정하며... 호혜적 관계를 만들면 그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신한반도체제’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한반도체제’는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입니다.” (강조와 밑줄은 필자가 친 것임.)

3) 조재연, “역사적 사실 과장한 ‘日 적대 정책’은 대중의 분노 동원하는 정치”, 문화일보, 2019년 4월 5일(<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0501073627328001>)

3·1절 기념사의 핵심은 북한을 ‘빨갱이’라는 이념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민족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경제적 번영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남’과 ‘북’이 이념을 넘어 경제적 호혜관계로 하나 되는 통일을 이루자는 선언을 이미 했던 것이다. 세간에 널리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체제를 달리하는 연방제 통일론’의 구체적 설명으로 보여 진다. 기저에 깔린 논리는 ‘한반도 평화경제론’으로 결국 ‘한반도 평화경제론’은 ‘체제를 달리하는 연방제 통일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경제론’은 한마디 요약하면 경제적 지원으로 평화를 사겠다는 대북경제적 지원의 논리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주는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가 먼저 도입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경제번영이나 한반도 평화로 연결되지 않을 것임을 경험한 바 있다. 과거 햇볕정책의 결과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파격, 파악하기도 힘든 숫자의 핵무기 개발과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임을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하고 개성공단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또 국민 세금으로 북한철도를 전면적으로 개보수 해준다고 하더라도 북한 비핵화는 얻어낼 수 없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햇볕정책에서 배운 한 가지 교훈은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데올로기는 민족의 염원인 민족통일을 위한 지원, 즉 달리 표현하면 민족주의 의식이다.

때문에 일부 (진보)좌파논자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인민민주주의가 실제로는 김일성 ‘주체사상’이라는 좌파 권위주의 독재임에도 민족 감정을 내세워 “민족끼리의 통일”로 미화하고 있다. 민족주의로 북한의 계급혁명론을 감추고 있으며, 북한핵 역시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의 것이 될 것이므로 위험하지 않다는 논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4. 민족주의의 철학적 빈곤

민족주의 이론가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은 ‘민족’(nation)을 고대로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실재적 집단이 아니라 근대의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산물’(a socially constructed community, imagined by the people who perceive themselves as part of that group)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민족주의(nationalism)를 ‘상상(想像)의 정치 공동체 의식(意識)’이라고 했다. 앤더슨 주장의 핵심은 민족 의식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상상(想像) 속의 의식이며, 철학적 빈곤함(philosophical poverty)과 모순성

(incoherence)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한반도에서 그 상상의 공동체 의식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 재현되어, ‘국민 의식’과 섞여 살아 숨 쉬며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결과는 민족주의가 공동체를 대내적으로 단결시키기 위해 만든 ‘올림픽 게임’과 같은 이벤트가 빈번히 자행된다는 것이다. 인류 화합의 축제가 민족의 축제로 변질되었음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김여정이라는 특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게 된 사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민족주의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때, 즉 ‘민족’의 과잉이 개인의 자유와 인권 침해를 가져올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일본의 야마토(大和) 관제 민족주의가 일본 군부를 태평양 전쟁으로 이끌었으며, 그 우익 민족주의가 일본의 민주주의 발전을 방해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다른 관제 민족주의의 극단은 앞서 설명한 과잉 독일 게르만 민족주의였다. 그 게르만 민족주의의 과잉이 히틀러의 등장과 유대인 학살을 초래했으며 결국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어졌음 역사는 알려주고 있다.

5. 나가는 말 - ‘관제 민족주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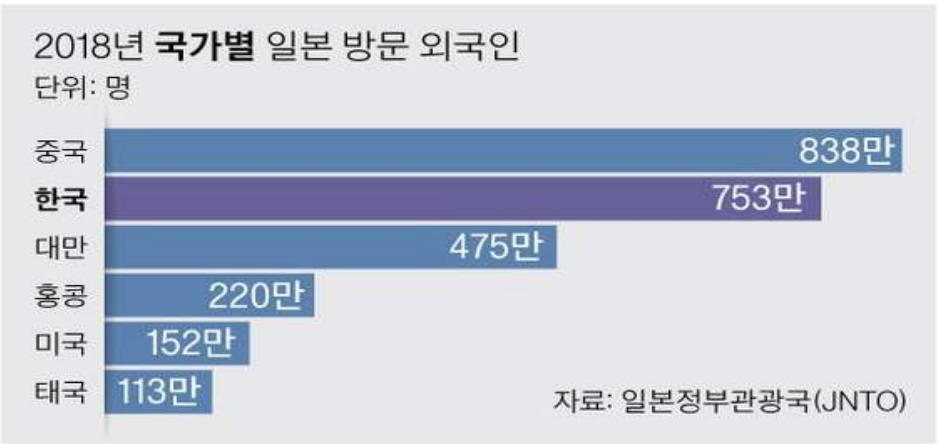
‘관제 민족주의’가 초래하는 부작용으로 가장 큰 것은 함께 평화롭게 지내야 할 이웃을 ‘악마화(demonization)’하는 것이다. 자신의 민족을 순진한 피해자로 만들기 위하여 타민족을 ‘악마화’하고 그 행위의 잔인함을 과장하고 과대해서 부각시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개봉된 많은 ‘반일 민족주의’ 영화들이 이러한 ‘이웃 민족 악마화’를 부추기고 있다. 우파가 북한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던 논자들이 이제는 일부 국사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을 동원해 일본을 ‘악마화’하고 있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어린 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적지 않은 인지 갈등을 초래한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가한 아픈 과거를 잊어서도 안 되지만 그러한 아픔을 초래한 조선 국왕의 무능과 당시 지도자들의 부패와 무능도 함께 기억하고 반성해야 균형 잡힌 역사관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극일(克日)은 일본보다 더 부강하고 더 민주적이고 더 성숙한 국가를 만들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성이 아니라 과거 일제의 부정적 측면만을 화면 가득히 줌업(zoom-up)함으로써 민족 감성에 호소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관제 민족주의’에 의한 ‘이웃 악마화’의 극복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만 가능하다. 이미 일반 시민들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관제 반일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언론은 2018년 한 해 일본을 방

문한 한국인이 753만 명이나 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중국인의 일본 방문자 숫자가 838만 명으로 1위이고 2위가 한국인 방문객이라고 말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2018년 국가별 일본 방문 외국인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출처:

https://2.bp.blogspot.com/-KnmdsKdKwiA/XKmOIEDCrKI/AAAAAAAAAA CmWE/WBvVd6v3LoQOclrTf0ad_EmIHA3P2UzqACLcBGAs/s1600/4.png

또 현실에서 보면 일본 돈까스 집, 라멘 집, 이자카야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듯해 보인다. 더구나 일본 라멘 집과 이자카야는 소녀상 동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놓고 일본말로 간판을 달고 있다. 그래야 장사가 될 것임을 알고 상인들은 있기 때문이다.(<사진 1> 참조)

<사진 1> 홍대앞 거리의 모습



출처: 표태준, “'와쇼쿠'의 진격… 홍대 앞을 통째로 일본풍으로 바꾸다.”

반일·친일 프레임을 깨자2: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

『조선일보』, 2019년 4월 20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9/2018111900031.html)

한마디로 현실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제 반일 민족주의’와 우리 국민의 속마음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고 그 간극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양국이 서로에게 3대 교역국가라는 사실도 지난 수년 내내 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고 있는 편협한 ‘관제(官製) 반일 민족주의’가 젊은 층의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극복되고 ‘열린 민족주의’로 나아가고 있지만 거꾸로 학교 교육, 언론의 보도, 영화와 방송에서만 부자연스럽게 ‘닫힌 민족주의’가 유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이웃을 ‘악마화’하면서 우리는 부모세대의 일제의 만행을 현재의 일본 젊은이들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또 그 질곡을 짊어지고 가게 해야 하는지 윤리적으로 고민할 때가 되었다. 그 해답은 국민 스스로가 찾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미 한 해 753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보면 국민 감성은 이미 반일(反日)을 넘어서 일본에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이미 “Enough is enough!”을 말하고 열린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해볼 만큼 해보았으면 이젠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이웃 국가로 대접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만 과거 아젠다에 빠져 미래를 보지 못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주한 미군의 일본 이전을 대비해서라도 일본과의 외교, 군사, 경제에서의 전략적 공조를 복원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라는 국익(national interest)에 바람직하지 않고 이웃 국가와의 친선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면 우리의 ‘관제 반일 민족주의’는 이쯤에서 정치적 이용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도 일본도 모두 미래를 위하여 ‘역사의 정치화’를 그만둘 때가 되었다.

반복되는 반일 소동, 그 이면의 친북적 의도

이 강 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1. 뜬금없는 독립문 퍼포먼스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은 “빨갱이라는 말은 일제 잔재”라고 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의 허구성은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별달리 지적 없이 넘어갔지만 따져봐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있었다. 독립문 관련 퍼포먼스다.

이번 3.1절 행사는 11시 광화문광장 기념식에 앞서 독립문과 대한문에서 각각 출발하는 두 개의 행진이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하도록 했었다. 문재인은 그렇게 집결한 군중들 앞에서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했다. 문재인을 비롯한 이 정권의 사람들이 그런 연출을 한 것은 독립문이 그만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이 독립문에 애착을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문재인은 작년 2018년 3.1절 행사는 독립문 앞에서 거행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내외는 독립문 앞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연출했다. 더 이전의 장면도 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6월 17일 출마선언을 할 당기도 서대문 독립문 앞에서였다.

이 같은 예들은 반일 캠페인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등이 독립문에 그런 상징성이 있다고 믿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저들의 무식함의 증거일 수밖에 없다. 독립문의 독립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뜻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독립문은 1897년 11월 20일 완공되었는데 이때는 일제시대가 아니었다. 독립문은 중국에 대한 사대의 상징이었던 영응문(迎恩門)을 헐어낸 자리에 세운 것이었다. 청나라의 책봉체제에서의 독립을 주창하고 기념하는 건립물이었다. 독립문 건립운동을 주도한 주체는 독립협회였는데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7월 2일 협회를 정식 발족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독립문 건립이었다.

독립문은 반일의 상징물이 아니었고 그래서 일제시대에도 허물어지지 않고 보존되었다. 심지어 조선총독부는 독립문을 문화재로 지정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을 들여서 보수공사까지 벌였다. 일제는 1928년, 독립문 보수를 위해 당시로서 상당한 거금인 4100원의 예산을 써서 수리 공사를 벌였으며 1936년에는 독립문을 조선의 문화재로 지정, 고적 제 58호로 등재하기도 했다.

문재인 등이 독립문과 관련한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과연 알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걸 안다면 반일·친일 소동을 벌이는 자들이 독립문을 앞세워 짐짓 비장한 퍼포먼스를 벌일 리가 있을까? 문재인 정권은 이번 3.1절 10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 정작 3.1만세운동이 시작된 파고다공원(탐골공원)은 빼고 독립문을 등장시켰다. 파고다공원에 대해 무슨 큰 유감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것은 무식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 이런 웃지 못 할 일이 단지 저들의 무식만의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독립문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선 제법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애써 지적을 하면 깨닫기는 한다. 그러나 굳이 설명이 없으면 대개의 경우 “독립”이라면 당연히 일제로부터의 것이려니 하고 지나쳐버리기 일쑤다. 이렇게 된 것은 국사 교육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명료하게 가르치지 않고 얼버무리고 넘어간 탓이 크다.

독립문과 관련된 경우는 우리 근현대사와 관련한 반일 프레임의 하나의 예일 뿐이다. 일제의 식민치하에서 독립하여 그 반정립으로 나라를 세우는 과정을 밟은 만큼 반일 정서는 어느 정도는 피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었다. 일종의 방치였으며 때로는 조장된 민족주의 캠페인이 있기도 했다. 그런데 그 틈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기본 행로와는 다른 의도를 품은 정치적 작동이 파고들곤 했다는 게 문제를 간단치 않게 했다.

그 대표적인 장면들이 4.19 직후 있었던 통일운동과 박정희 정권 초창기의 6.3 사태였다.

2. 4.19 직후의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4.19 직후에는 어떻게 하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민족통일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학생들 간에 토론이 활발했습니다. 4.19는 자유당 독재와 3.15 부정선거에 의해 촉발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도, 그 당시에는 민주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안병직,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에 서다』, 기파랑, 2007)

1960년 11월 1일 서울대에서 민족통일연맹(민통련)이 출범했다. 민통련은 1961년 5월 3일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를 내걸고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했다. 그리고 1961년 5월 무렵까지 서울과 지방의 18개 대학에 민통련이 결성되었다. 그 배경에는 4·19 이후 느슨해진 상황을 틈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통칭 혁신계라 칭해진 좌익세력의 움직임이 있었다.

친북좌익들의 의도적 책동

4.19세대 주역의 한 사람이었던 이영일 전 의원의 회고가 있다. 이영일은 광주 일고를 나와 1958년 서울대 문리대에 진학했으며 4.19혁명 당시에는 정치학과 3학년이었다.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해 4.19혁명 56주년이었던 2016년 4월 19일 개최된 제62회 이승만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4.19 당시 젊은 학생들은 대통령으로서의 이승만 박사는 알지만 그분이 독립운동과 건국을 위해, 한국전쟁과 휴전과 한미방위 동맹을 위해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바로 이 무지의 공간을 파고든 것이 친북좌파들이었다. 이승만 박사 때문에 적화통일이 안된 것을 몹시 애통해했던 친북공산주의자들이 나서서 4.19 이후의 혼란을 틈타 반 이승만 모략책동을 치밀하게 펼쳤다.”

덧붙여 그는 통일운동을 들고 나온 서울대 민통련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4.19 직후 민족통일연맹이 결성된 후 필자는 민통련의 선전위원장으로 활약했는데 이 때 한국의 각지에 잠재되어있던 공산 분자들이 제철을 만난 듯 민족통일연맹운동에 날파리 떼처럼 몰려들었다. 이들 중에는 민청학련사건에 관련되어 사형당한 사람도 끼여 있지만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이들이 맨 먼저 들고 나온 주장은 이승만의 건국노선을 소남한단정(小南韓單政) 노선이라고 맹공하였다.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김구(金九) 선생 중심으로 통일되었어야

할 나라가 이승만이 미국과 짜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했기 때문에 통일이 안 되고 한반도에 두 개의 분단국가가 세워졌다는 것이다. 매우 그럴듯한 소리였다. 이 주장이 허구였음을 내가 깨닫는데 반세기가 흘렀다.”

1961년 5월 5일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결성준비대회’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세계사적 현 단계의 기본적 특징은 식민지·반식민지의 민족해방투쟁의 승리”라고 규정하고, “식민지적·반(反)식민지적 반봉건성의 요소”를 척결하고 “민족·대중세력은 매관료세력을, 통일세력은 반통일 세력을, 평화세력은 전쟁세력을 압도”하여 통일을 실현시켜야 된다는 것이었다.

‘식민지·반식민지의 민족해방투쟁’ 운운은 거슬러 올라가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스탈린의 민족전략에 기원을 둔 소련의 세계적화전략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었으며 소련을 종주국으로 한 북한 공산세력의 대남전략의 핵심이기도 했다.

민족주의 정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강력했다. ‘통일’ 구호도 그래서 위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친북좌익의 정치적 비수가 숨겨져 있다. 이념을 달리하는 더욱이 혈전을 치른 두 개의 적대적 체제 사이에 협상을 통해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은 감상이나 기만 둘 중의 하나일 수밖에 없다. 남쪽에 낭만적 감상이 있었다면 북한에는 그것을 파고드는 대남전략이 있었다. 2013년 1월 17일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WWC)는 그 실상을 말해주는 자료를 공개했다.

김일성, 4·19 직후 北 주도 통일 노리고 남한 진보단체 접촉 시도했다

“북한의 김일성이 1960년 4·19 혁명 직후 북한주도의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판단, 실제로 대남전략 추진에 들어갔다.”

“김일성이 ‘남한 문제에 대한 발 빠른 정책결정을 위해 남한문제중앙국(CBSKI)을 설립했다’고 말했다” “CBSKI 설립은 남한 내 지하조직을 부활시키고 평화통일 선전작업을 위한 것이다.”

“남한 출신의 인민군 10만 명 가운데 일부를 통일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공산대학을 설립했다.”

“당시 북한 지도부는 4·19 혁명이 진정한 계급혁명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학생조직이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보고 남한 내 진보단체와 접촉을 시도했다.”

“김일성은 당시 북한이 정치·경제적으로 남한보다 안정돼 있기 때문에 북한주도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자신했다.”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4·19 혁

명 직후 남북통일이 가능성의 단계가 아니고 실제로 임박한 것으로 판단했다.”

옛 소련의 평양주재 대사였던 알렉산더 푸자노프가 1960년 3~12월까지 작성한 20건의 저널(개인기록)의 주요 내용이다.

김일성의 1960년 8.15 경축사와 연방제통일 방안 제기

4.19 혁명 이후 7.29 총선을 치른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1960년 8월 15일 김일성은 8.15 경축사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대남전략 상의 매우 중요한 정책 하나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바로 ‘연방제통일방안’이었다. 북한이 남북연방제통일 방안을 내건 것은 이때가 최초였는데 이후 이 연방제통일 방안은 북한의 기본 입장으로 확립되었다.

일찍이 레닌은 민족 식민지 문제에 대한 테제에서 “강력한 공산국가와 비공산 민족국가가 과도적 형태의 연방제를 거쳐 프롤레타리아의 완전 통일국가에도달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김일성의 연방제 방안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구사하고자 한 남한 적화의 실천 수단이었다. 4.19 직후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1960년 5월 초 북한을 방문한 쿠즈네소프 소련 외무성 부상은 레닌의 지침에 따른 “연방제”를 권유하였다.

4.19 이후인 1960년 7월 29일 행해진 남한의 총선에서 혁신계도 민의원에 사회대중당 4명 한국사회당 1명, 참의원에는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이 각각 1명씩 총 8명이 진출하게 되었다. 그들의 당초 기대에는 못 미쳤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놀라운 결과였다. 6.25를 거치는 동안 완전히 사멸한 듯 보였던 좌익 정치세력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교두보를 갖게 된 것이다. 남한에서 좌익 정치세력이 다시 의석을 확보한 것은 이후 수 십 년의 세월이 흐른 2004년이였다. 민주노동당 이때 10석을 확보했는데 1960년 혁신계의 의회 진출 이래 이래 실로 44년만이었다. 더욱이 1960년 당시 혁신계는 의석수는 비록 2004년의 민노당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 영향력은 훨씬 더 컸다.

그런 상황에서 남한에서는 혁신계와 그에 호응한 학생세력들이 중심이 된 통일운동이 거세게 일어나 1961년 5월 13일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촉진 쉼기대회>에는 수만 명의 학생 시민들이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를 외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체제에 대한 명백한 적신호였다. 더욱이 적신호는 ‘데모’만이 아니었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간첩침투활동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다. 1960년 한해만 해도 침투간첩이 100명 넘게 체포되었다. 심지어 ‘통일

운동'을 한다는 인사들이 월북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역사에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이 흐름이 계속 방치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북한 김일성의 '희망'이 단지 희망으로만 그쳤을 것인가? WWC 보고서는 그에 대해 이렇게 결론내리고 있다. 당시 4·19 직후의 북한의 대남전략 추진은 “결국 남한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3. 반일 민족주의를 앞세운 6.3 사태

6.3사태 당시도 민족주의의 구호가 위력을 떨쳤다. 4.19 직후 장면 정권 시절의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가 “우리 민족끼리”의 고전 버전이었다면 6.3사태 당시에는 반일이 전면에서 위력을 행사했다. 그런데 거기에도 좌익적 흐름이 무관치 않았다.

1964년 3월 24일 한일국교정상화 추진에 반대한 서울대 시위대의 주장에서 이미 그런 점을 엿볼 수 있다. 당시 서울대 시위대는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1. 민족반역적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하고 동경체제 매국정상배는 즉시 귀국하라.
2. 평화선을 침범하는 일본어선은 해군력을 동원하여 격침하라.
3. 한국에 상륙한 일본 독점자본가의 앞잡이를 즉시 축출하라.
4. 친일 매국하는 국내 매판자본가를 타살하라.
5. 미국은 한일회담에 관여치 말라.
6. 제국주의 일본 자민당 정권은 너희들의 파렴치를 신의 양화(殃禍)를 입어 사죄하라.
- 7.朴정권은 민족분노의 표현을 날조, 공갈로 분쇄치 말라.
8. 오늘 우리의 쫓겨난 역사를 증언하려니와 우리의 결의와 행동이 「신제국주의자」에 대한 반대투쟁의 깃점임을 만천하에 공포한다.

민족주의비교연구회

3월 24일 시위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3월 23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민족주의 비교연구회」라는 학생단체 주최로 ‘한일관계 강연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이하 민비연)가 간단치 않은 조직이었다. 민비연은 1963년

10월 서울대 문리대생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되었는데 ‘제3세계 민족주의 운동’을 비교 연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다. 당시 한일회담반대투쟁을 주도한 것은 이 민비연이었다. ‘제3세계 민족주의 운동’을 비교 연구한다는 것은 사실 좌익 이론 학습과 무관할 수가 없다. 제3세계 민족주의 운동론은 결국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제국주의론>에 입각한 반제투쟁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1964년 8월 14일 ‘인민혁명당 사건’(1차)으로 도예종, 이재문, 박현재, 김중태, 김정강, 현승일, 김도현 등이 체포되었다. 그 중 김중태는 한일회담반대투쟁을 주도하던 민비연의 회장이었다. 김중태는 인혁당 사건에선 공소 취하되었지만 1965년 9월 ‘민비연 사건’(1차)으로 다시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15개월을 복역하고 출옥한 김중태는 1967년 ‘동백림 간첩단 사건’과 관련된 2차 ‘민비연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다. ‘동백림 간첩단 사건’ 관련자인 서울대 사회학과 황성모 교수가 민비연을 조직하고 이끈 지도교수였던 게 문제였다. 황성모의 행적에는 의심의 여지가 분명히 있었다. 우선 그는 6.25 당시 인민군에 복무하다 낙동강 전투에서 국군에 잡혀 거제 포로수용소에 갇힌 바 있다. 독일 유학 시절에 동베를린을 방문했으며, 거기서 서울대 후배인 동백림 사건 관련자들을 만난 것도 사실이었다.

4. 뿌리 - 해방공간 당시부터 북한과 좌익은 ‘민족 공작’을 했다

가난한 후진국에서의 민족주의 정서는 일반적 경향이다. 러시아 혁명에 성공한 레닌은 초기부터 국제적인 반자본주의 투쟁의 일환으로 반제국주의 민족운동을 강력하게 지원했다. 이후 특히 식민지 경험이 있는 제3세계 후발국들에서 민족주의가 좌익의 정치적 도구가 되는 상황이 일상화되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1948년 8월 15일 건국에 이르기까지 3년 간 한반도에선 ‘민족’이라는 구호는 일단은 우익진영의 것이었다. 그런데 분단이 현실화되면서 ‘민족’에 서서히 좌익적 관념이 침투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앞두고 한때 민족진영의 거두로 자리매김했던 김구 김규식 등이 민족 단일정부 수립을 내세우며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고 김일성을 만난 것이 바로 그 단적인 경우였다. 김구 등의 ‘이탈’은 단순히 ‘민족적 열망’만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다. 1950년 2월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남북협상파와 임정 계열 일부 출마자들을 지원하던 중 경찰에 검거된 거물급 간첩 성시백이라는 인물의

공작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전쟁은 공존할 수 없는 이념과 체제의 선택의 결과였다. 남과 북은 이제 단순히 같은 민족이 아니라 상이한 이념에 입각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적대적 체제였다. 이 본질을 간과하면 위험에 빠진다.

5.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위협으로 치닫고 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자기정체성의 정립에서 가장 중요한 축대는 타자다. 자기정체성이란 곧 그에 상응한 타자를 갖는 것과 같다. 민족과 국가도 마찬가지다. 타자로서의 다른 국가(혹은 민족)은 대개 아니 거의 절대적으로 적대적 관계로 등장하여 아(我)의 정립을 매개한다. 만약 적대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타자는 아(我)를 흡수 통합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 한국인의 자기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이 중화로부터 풀려나면서, 그리고 동시에 일본과의 적대적 조우를 하면서였다. 이후 일본의 제국질서 안에 편입돼 있던 상태에서 자기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했던 한국인은 일본을 적대적 타자로 하는 논리를 만들어가게 되었다. 반일은 그렇게 하여 한국의 정체성으로 숙명적으로 내재화(內在化)하게 됐다.

그러나 그 적대적 타자로서의 일제는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존재하지 않는 허구를 타자적 대상으로 한 자기정체성이란 퇴행적 질곡이 된다. 뿐만 아니라 새로이 맞게 된 명백한 적대적 존재를 타자로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기정체성도 위기를 맞게 된다.

대한민국은 1948년의 건국과 6.25를 거치면서 북한이라는 명백한 적대적 타자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적대적 타자를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의 적대적 타자를 계속 현재의 적대적 타자로 되새기고 있다. 착란 상태다. 4.19 직후와 6.3 사태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민족끼리”라는 기만적인 구호에 현혹당하는 착란을 반복하고 있다.

반일·친일 문제는 단순히 일본에 대한 태도 문제만이 아니다. 일본에 대한 과도한 거의 시대착오적인 태도는 말할 것도 없이 매우 소모적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자기정체성의 문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벌이는 친일잔재 소동과 반일 캠페인은 과연 어떤 것인가? 독립문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무식함의 문제와는 별도로 어떤 의도를 품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할 수 있는가?

우리 근현대사의 일본 관련 사안들에는 채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으며 착오도 있다. 이 틈을 파고든 고의적인 정치적 착란이 끊임없이 조장되고 있다. 북한은 ‘민족’이라는 논리의 차원에서도 스스로를 김일성민족이라고 칭한 지 오래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김일성민족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것을 고의적으로 가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행태가 그들의 이념적 정체와 속성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문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누가 적인지를 구분 못하는 퇴행적 착란에 빠지면 ‘국가’가 위험해 진다. 그리고 국가가 위험해지면 그 안의 ‘국민’도 위험해진다. 지금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끌려들어가고 있다.

■ 정책토론회

토론

- 김 행 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 여 명 서울시의회 의원
- 홍 수 연 자유경제&교육포럼 대표

‘역사의 정치화’와 ‘관계 반일 민족주의’의 극복 토론문

김 행 범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1. 부족주의-민족주의- 반일 민족주의

먼저 부족주의를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 성립하는 민족주의를 보자.

* 부족주의(部族主義, 영: Tribalism)는 일반적으로 동질적인 전통과 조상, 언어, 문화, 종교 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추구하는 이념.

* 민족주의: 일정한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의 집단인 국민과 그 국민에 대해 가지는 소속감이나 애착심,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려는 생각이나 정치적 운동. 민족주의는 본질상 부족주의의 잔재이다(이영훈 교수).

*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 현재 일본이라는 특정 국가에 대한 불균형적 집단 증오의 사조가 정치, 경제, 및 문화에 이르기까지 확산되는 추세. 더 중요한 국면은, 한국의 반일 민족주의의 확산 및 유지를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이 정부 집권층이 선도한다는 특징이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심화되고 있다.

독도가 일본과 한국 어느 국가에 속하는가? 에 관한 교사 개인의 의견을 표현했다가 ‘주의’ 처분을 받는 의식 수준(연합뉴스. "친일 발언했다"..중학생들 항의로 교사 '주의' 처분받아. 2019.04.28.). 그럼 친북 발언, 친중 발언, 친미 발언, 친러 발언은 문제시될까? ... No! 일본이기 때문에 징벌을 가하는 것.

2. 이 정부가 내세운 반일의 사유들은?

① 과거의 사과가 부족하다는 점

그러나 어떤 시점까지, 어떤 수준, 어떤 용어로?

국제법상 한일청구권협정(196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일제의 식민 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말끔히 처리하지 않은 채 국교를 맺어 지금까지 비판을 받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1965년 한국-일본간 다시 국교를 맺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이다. 이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 ① 일본이 한국에 3억 달러의 무상 자금, 2억 달러의 유상 자금, 기타 민간 협력에 의한 자금을 지급한다.
- ② 이것으로써 청구권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결된다.

* "한일청구권협정,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헌법재판소 결정, 2015.12.23.)

② “일본이 다시 군사대국으로 일어선다”는 우려성 구호

그러나 미국 국제전략 문제연구소(CSIS)에서 아베의 천명을 주목해야.

① 일본은 국제규율을 선도하는 국가로 남아야 한다.
 ② 일본은 국제적 공동자산에 대한 수호자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
 ③ 일본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미국 한국 호주 등)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③ 반일 프레임을 고안한 진정한 이유는?

반일 민족주의란 시대착오적 집단사고를 몰아가는 이유는 지난 역사 공부 바로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바로 현 정권의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 관계 때문이다.

첫째, 일본 (및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독립운동을 한 노선의 건국운동 집단을 적폐 집단으로 연결할 고리를 찾기 위한 것. 그에 비해 중국, 만주 등에서의 항일 운동 노선을 정통으로 확립하려는 역사 변개 운동의 시도.

둘째, 위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현 남북관계에서 이 정권의 친북적 통일정책의 정당화 근거를 찾기 위한 것. 처음에는 일단 김구 등의 임정 노선의 인사들의 제자리 찾기라는 명분으로 시작하지만 거기에 그칠 수 없다. 임정의 항일 운동의 제약성과 실효성에 직면하면 필연적으로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계열의 항일 노선 인사들에게까지 연결될 것이고 그리하여 김원봉, 주세죽, 박차정....에게까지 이미 연결시켰다. 궁극적으로는 공산 빨치산 노선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그 경우 그들이 ‘반일’ 투쟁에 열성적이었다는 점을 가장 부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밑거름이 될 사조로 반일 민족주의의 불을 다시 지피고 있는 것이다.

셋째, 결국 궁극적으로 바다 건너의 일본을 공격할 수도 또 거기서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전무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친일-반일 프레임을 강하게 설계하고 나온 이유는 실은 남한 사회 내부에서 이 구도를 통해 또다른

반일·친일 프레임을 깨자2: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

소위 ‘적폐세력’ 청산을 도모하고 나아가 친북적 통일 정책의 기반을 놓기 위한 것이다. 그럼 점에서 이 정부의 친일-반일 프레임은 일본에 의한 피해자들을 위한 경제정책도 문화정책도 복지정책도 아니고 그의 좌경 통일정책과 정치 반대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정화’ 정책의 재현이다.

3. 친일-친중-친북-친미: 어디로 가야하나?

① 징비록의 첫 대목에 나온 신숙주가 성종에게 한 유언: “일본과의 화친을 잃지 마소서”. 중국에 비해 너무나 열등한 나라 일본, 늘 관찰하고 평화를 유지하라는 뜻, 이를 무시하여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었음에 대한 유성룡의 의도였을 것(조선일보, 2012. 4.27)

② 한-미-일 삼각동맹이 이제 와해되고 있는가? (3각 ⇨ 2각)

2010 캐나다 토론토에서의 G20 정상회담부터 미국은

한미 동맹은 린치 핀(Linch pin), 미일 동맹은 코너스톤(Cornerstone)으로 구분.



어느 게 중요한가?

대체가능성(한번만 어긋나도 불능화 가능성)

③ 한국은 조선을 수천년 핍박한 중국에 대해 배상청구를 한 적이 있었던가?

* 청일 전쟁 후 시모노세키 조약 1조: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이 독립 자주를 손상하는 조선국에 대한 청국의 공헌(貢獻), 전례(典禮) 등은 장래 이를 완전히 폐기한다.

4. 결어

이미 한일 양국 국민은 문화 및 의식의 공동체이고, 무역 및 한일 통화스왑

반일·친일 프레임을 깨자2: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

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공동체이고, 자유민주적 헌법질서를 공유하고 있는 정치 공동체이다.

이를 뒤엎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고자, 아물던 상처를 다시 찢어 통증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 반일(反日)의 증오심을 복원하려는 부족국가 수준의 민족주의에 탐닉하고 있다. 이 반일 사조를 보조하기 위해 ‘척왜양창’을 내세우던 전근대적 농민봉기인 동학(東學), 민비 및 고종이 환생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정부가 돌아가려는 완전히 새로 경험할 국가가 청일전쟁에 승리한 청국의 간섭해주고, 일본에 승리한 동학교도가 다스리고, 만주 항일 공산주의 빨치산의 손자가 다스리는 나라일까?

이 시대에 친일-반일의 인공 틀을 강요함은 무의미하다. 주변국 및 국제정세의 현실에 정확히 대응하고 감상이 아닌 냉철한 호혜주의적 변영을 추구하는 미래지향의 길이 국가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양식있는 지도자들은 당연히 그 길을 걸어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제외교의 기본이 뒤죽박죽되는 국가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둔 나라인 일본도 참 불운하다.

졸렬한 반일민족감정

여 명
서울시의회 의원

얼마전 인천국제공항행 공항철도를 이용할 때였다. 전철 내 광고용 화면에 위안부 소녀상이 등장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일본 정부가 이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로비를 자행하고 있으며 일본 정치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오랜 침략의 역사를 설명하는 장면 역시 잊지 않았다. 이 모든 내용은 친절한 영어 자막이 함께 했다. 내 맞은편에는 일본인 관광객 가족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나는 창피함으로 고개를 떨궜다.

한국에서 사람들을 가장 빠르게 흥분 시킬 수 있는 도구는 반일민족감정이 아닐까 한다. 이를 방송국 PD가 활용하면 기본 방송 시청률이 보장되고, 언론사 기자가 이용하면 기사 클릭수가 현저히 늘어난다. 그 중 정점은 정치의 영역이다. 이 나라는 보수이건 진보이건 정치인이 ‘일본에게 침략 사실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겠다.’, ‘친일파 청산을 마무리 하겠다.’ 등의 발언만 하면 대다수의 국민들로부터 ‘개념 정치인’ 하며 호응을 받는다.

나는 반일민족감정이란 졸렬함 그 자체라고 말하고 싶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함께 일본 외국인 관광객 비율 1·2위를 다투는 나라다. 또한 반일민족주의가 실체가 있다면 한국에 각종 일본산 맥주, 일본의 대표 의류 브랜드, 일제 문구류가 팔을 못 붙이고 돌아갔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수치만 보자면 일제를 사랑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다.

이 민족감정이란 것이 형평성도 없다. 조선 500년 역사만 한정해 보더라도 한반도는 임진왜란 당시 왜인들에게 소위 말하자면 ‘털린’ 것보다 명나라와 청나라에게 ‘뜯긴’ 총량이 더 크다. 피해의 형태가 재물이든 사람의 목숨이든 말이다. 그런 역사를 겪은 후 현대에 들어와 남북 이념 대립과 분단의 현실에서,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 진영이고 중국은 북한 김씨 정권의 후원자이며 공산진영의 마지막 주자이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중국을 향해 ‘대국’이니, 실체가 불문명한 ‘G2’이니 하며 자발적 사대에 여념이 없다. 나는 우리나라

라 사람들의 유전자 깊숙이 對중국 사대주의가 박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다.

물론 이웃국가에게 지배당한 36년의 한은 쉽게 해소될 수 없는 것이겠다. 나 역시 일본 식민지배 시기 조선인 독립투사들의 수많은 위인전과 그분들이 당한 고문 방법과 친일 부역 인사들의 명단을 외우며 자란 세대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러니까 한창 죽음에 대한 공포와 호기심이 있던 그 나이대의 내 가장 큰 공포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였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걸까?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는 우리들의 집단기억 속에서 실제 역사보다 더 끔찍하고 악랄하게 형체를 뒤틀고 몸집을 불려온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아가 이 '분노의 집단 기억'이 21C 우리나라의 국가 핵심이익과 관련한 경제·외교·안보문제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맞서 한일간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여러 좌파역사단체들의 여론몰이로 체결까지 5년이 걸렸다. 박근혜 정부의 선명성 짙은 반일 발언들은 양국간 경제 교류를 얼어붙게 했고 안보의 영역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군사 재무장에 손을 들어주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각양각색 반일 정책은 말하기도 입 아프다. 취임 초부터 일본 특사로 파견된 당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측에 '위안부 강제동원의 인정과 사과', '위안부 협상 유감'의 뜻을 전했고 이어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성과중 하나였던 위안부 합의가 폐기 됐다. 사법부가 일본에 식민지 시기의 강제 징용을 배상하라며 판결해주는가 하면, '친일' 프레임을 씌워 건국의 아버지들의 건국 훈장이 폐기 되기도 했다. 그런데 반일 대통령 문재인은 일본 극우 세력이 세운 학교를 졸업했으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제 시대 때 중추원 참의였다는 것은 대단한 블랙코미디다.

잠깐 위안부 문제를 들여다보자. 박정희 대통령 집권 초기 일본과의 국교가 정상화 된 이후 일본은 동아시아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의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배상금 전달했다. 조선 총독부 폭파로 대표되는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잡기도 있었다. 일본의 조선 식민 지배에 대해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로는 최초로 공식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과 있었고 재작년 11월에는 주일 대사가 아베 총리를 대신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초의 공식 인정과 사과 그리고 배상을 완료 했다. 이렇게 현대에 들어와 한·일관계를 회복하고 한국인들의 '역사적 한' 을 풀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반일민족감정을 포퓰리즘으로 활용하는 정치인들뿐만 아

나라 분노와 증오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위안부는 창녀' 라는 발언을 한 바 있는 이른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모 단체(최고 임원 중 2명의 배우자가 간첩혐의 有)가 있는가 하면, 선택적 조작이 들어간 <친일인명사전>이라는 것을 제작·배포해 이념전쟁에 이용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반일민족감정이 존재해야만 살자리와 설자리가 있는 위선자들이다. 이들이 이렇게 대중으로부터 '민족적' 슬픔과 분노를 주어 짜내 정치적인 것을 기획하면 대체 무슨 일에 도움이 될까? 국가의 이익에, 청소년들의 교육에, 미래의 거울로서의 국민의 역사인식에 어떤 도움이 되냐는 말이다.

역사시대의 문제는 역사의 언어로 풀어야 할 시기가 온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아베 총리 역시 집권 초기 일본식 내셔널리즘(민족주의)을 자국 국내정치에 탁월히 활용하기는 했다. 이는 역시 일본 국민들의 민족감성을 자극해 강한 우익적 목소리를 내는 자민당의 집권을 도왔다. 그러다보니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막말로 느껴질 수 있는 발언들이 아베 내각에서 종종 터져 나오기는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우리의 적국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본의 국내 정치적 문제이지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감정적 적국일 수는 있겠다. 이겨버리겠다는 극일 감정이라고 한다. 이승만·박정희 두 대통령은 이 극일감정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나라를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일본에 손을 내밀어 차관을 끌어와 국가 개발의 토대를 다졌다. 실제 한일국교 정상화로 받아낸 차관은 포항제철 건립, 농업 현대화, 학교 개·보수 등에 요긴하게 쓰였다. 우리는 2017년을 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향하는 한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안보·경제적 파트너이자 문화적 라이벌이다. 특히 안보와 관련해, 자유 진영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는 한·일 양국이 합심해 헤쳐나아가야 할 당면한 위기이다. 한일 간 역사 문제는 양국이 조심스레 들여다봐야 할 과거의 유산으로 후세대에게 물려주자.

친일 반일 프레임은 좌파 정권의 정적 제거용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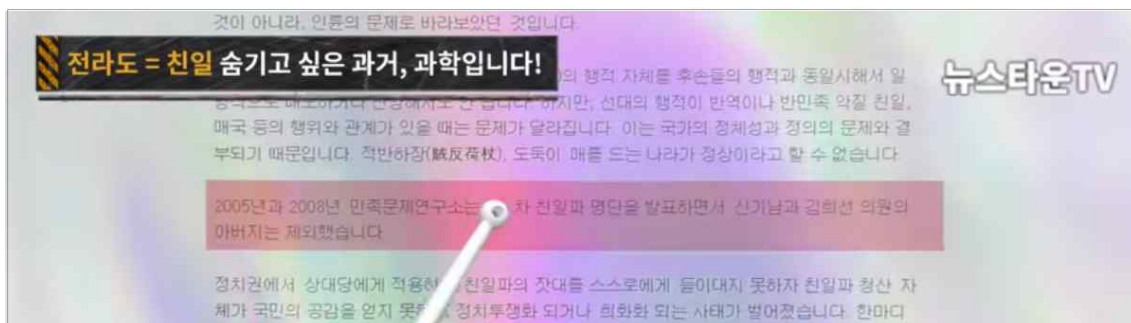
홍 수 연
자유경제&교육포럼 대표

반일을 하면 애국자이고 의식 있는 국민처럼 보이는 것이 만연한 요즘이다. 그리고 친일적인 마인드나 의식을 갖고 있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젊은이들도 많다. 이제 우리의 국력도 열등감에서 벗어나도 될 만큼 신장을 하였고, 우리의 긴 역사에서 보면 조선시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대는 오히려 일본에 대해 우리가 훨씬 월등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단 몇 십년간의 짧은 역사가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일본을 객관화 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픈 일이다.

광복 60년이지만 아직도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원인은 교육에 있다. 주입과 세뇌가 끊임 없이 반일을 강요하고 있고 우리에게 마음의 빔으로 떠오른다 마치 부모가 죽을 때 남긴 것 같은 부채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며 괴로워 하는 자식처럼 현대의 젊은이들은 반일을 해야 하는 의무감을 갖고 있다.

과연 이러한 행태가 옳바르다고 볼 수 있을까? 김행범 교수의 발제문에 반일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현 정권의 이해관계라 했고 이강호 대표의 발제문은 민족주의를 내세운 반일은 북한 정권과의 연관성에서 있다고 했다.

먼저 김행범 교수의 발제문과 관련하여 친일 청산을 외치는 좌파 정권의 지식 창고 역할을 하는 민족문제연구소는 2005년, 2008년 친일 명단 공개와 관련해 신기남 김희선 아버지 친일 명단에서 제외 시켰다고 유튜브 동영상에서 김정민 박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반일·친일 프레임을 깨자2: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

때문에 반일 프레임은 좌파들의 정적 제거를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전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현재 민주당을 추종하는 좌파 논객의 경우 아예 자식을 일본 국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사실이 잘못 된 것은 아니다.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적폐나 친일 청산파라는 오명을 씌우며 맞지도 않은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의 아이들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일본을 추종 내지 추앙하고 있다.

좌파는 왜 친일파는 청산한다고 하면서 일제시대 적산 가옥은 보존하려고 하는가?

참여인원 : [12명]

카테고리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시작 2019-01-17
청원마감 2019-02-16
청원인 naver-***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답변완료

청원내용

손혜원의원의 목포 적산가옥 투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왜 좌파는 친일파는 청산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제시대 적산가옥은 보존해서 돈 벌자고 하는지 아이러니 하네요?목포,군산,익산등...

복부인 아줌마 형태의 손혜원의원은 적산가옥에 투기하며 보존하여 돈을 벌자고 하였는데 그러한 행위는 친일적 행위에 속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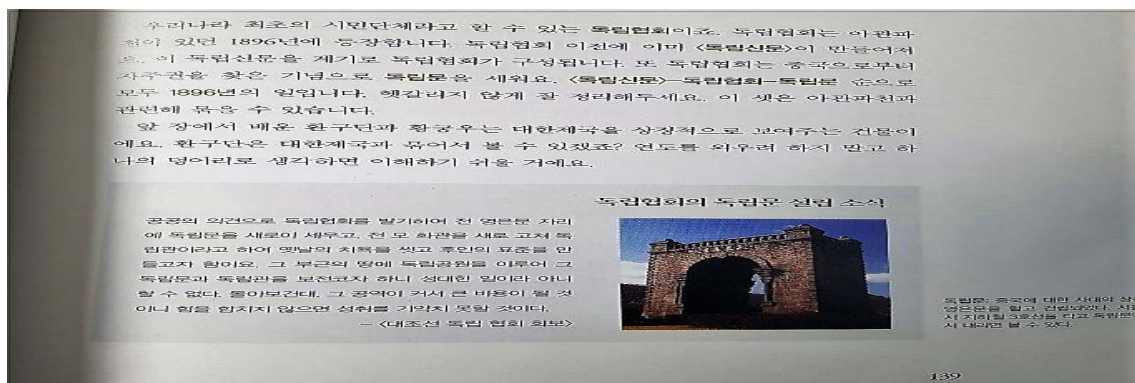
진중권 씨는 2005년 5월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자신의 아이에게는 두 개의 국적이 있다면서 '일본 국적 덕분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는 출산비를 전액 일본 정부로부터 돌려받았고, 매달 5만원 가량의 양육비도 받고 있다'고 했던 인물이다.

그는 또 '사회의 지도층 여러분, 제발 제 기득권은 총 들고 제 손으로 지킵시다. 가진 것 없어 지킬 것도 없는 집의 자식들에게 시키지 말고'라고 말한 뒤, '이 빌어먹을 나라의 국적, 미제 국적보다 혈값에 팔리는 이 국산 국적을 나도 포기하고 싶어진다'고 말했다.

조갑제 닷컴의 김필재 기자의 기사문중에서 ... 발췌했듯이 이러한 내용은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좌파들에게 양심은 존재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제대로 친일 청산을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지만 그들의 친일 청산에 본 뜻이 있다면 당색과 무관한 정확한 근거를 갖고 조심스럽게 해야 할 문제이다.

이강호 연구위원의 발제에서 현 정권의 3.1절의 독립문 퍼포먼스에 대한 지적은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독립문에 대한 일반 한국사 고등학교 교재에는 정확히 나와있다. 아래 참조

독립문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지만 근현대사 부분의 진도는 좌경화 된 교사들에 의해서 소홀히 담아가며 오로지 반일 감정 고취하기 위한 역사 중점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으로부터 독립인줄 아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 국가의 대통령이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사실을 몰라서 3.1절 행사에 독립문 의미를 두었다는 것은 참 한심한 노릇이다. 그리고 독립협회가 당시 지향 했던 것이 자유민권, 자강개혁, 자주 민권인데 그 중 자강개혁은 자본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을 아는지 모를 일이다.



평소 역사의식에 관심 깊다고 소문난 대통령이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제대로 모르고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지향점은 진정한 자본주의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앞뒤가 모순이 된 것은 좌경화 된 사람들의 오래된 공통점이다. 그들에게는 진정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역사도 과장 조장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 바른 역사를 배우고 자라야 할 후세대에게는 독이 된다.

친일 반일 문제에 대해 학교에서 좌경화 교사들의 강조는 북한은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고 남한에서는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왜곡 하며 수업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친일 청산은 자신들과 이념이 같으면 잘 살게 해주고 이념이 다르면 친일 청산을 빌미로 사형을 하였을 뿐이다. 다음은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 위키의 내용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가장 노골적인 친일파들로 손꼽히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인 **심형**, **문예봉**, **황철**, **이연상**, **조영출** 등의 인물들이 해방 후에는 월북해 또 다른 권위주의 체제였던 북한 정권을 선전하는 역할에 충실하며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북한도 그냥 필요에 따라 구령이 담 넘어가듯 봐줬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김정일**의 부인인 **고용희**도 골수 친일파 후손이다. 고용희 문서 참조.

물론 위의 백과사전은 친좌파 성향이기에 때문에 조금 더 대한민국의 친일 청산에 관하여 비판 하였지만 그야말로 오십보 백보인셈이다. 이러한 주입식 반일 프레임이 학교에서, 언론과 출판계에서 벌어져 대부분의 국민이 일본을 대하는 것이

반일,친일 프레임을 깨자2: 일본을 이해하고 같이 발전해야

객관화 되지 못한 감정적 적대심은 오히려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만 생길 뿐이다.

막연한 왜곡과 이웃나라에 대한 감정적 대립은 결코 대한민국에 이로울 것이 없다. 이웃하는 나라를 객관화 시켜 냉정한 이성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보는 것이 실질적 국익에 도움이 된다.

교육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이다. 그렇게 한 국민의 투자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써먹는 자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역사에서 배우는 일제 강점기는 침략 정책이나 수탈 내용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진정 과거 불행의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에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당시 열강들에 의해 우리는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영광된 길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그것이 큰 의미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는 길이 될 것이다.

또, 두 발제문에서 공통되게 지적하는 민족주의 문제도 민족과 국가를 동일한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21세기 현대 사회는 민족을 앞세운 국가 개념은 매우 후진한 국가 형태이며 앞으로 미래 국가 개념은 정신 가치와 이상을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국가여야 한다고 본다. 이미 다문화로 가진 사람들도 한국 사회에 많이 유입되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기 위해 왔다면 함께 추구하는 정치 이념과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한반도에서 60년 이상 그 체제에 대해 충분히 실험을 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이러한 프레임 전쟁으로 국력을 소비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좌파의 각성과 그들의 선동에 휩쓸리는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MEMO>

[illegible]

[illegible]



• 자유경제포럼